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54
----------	------

발의 연월일 : 2020. 8. 28.

발 의 의 원 : 김성태 의원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이시복 의원
(이상 6명)

1.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거공간 지원’을 신설함(안제6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예산조치 : 부서협의 필요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공간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p>1.~3. (생략)</p> <p><u><신설></u></p>	<p>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u>4. 주거공간 지원</u></p>

관 계 법 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8-12-31 조례 제 51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19.]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12. 19.]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19.]

□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2-31 조례 제 51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100만원
3. 설날·추석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

제7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519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